

# 의안검토보고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8. 17. 대전광역시장
2. 건 명 :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3. 안전요지 : 따 로 불 임
4. 검토의견 : 따 로 불 임

위 안전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2009년 9월 일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연 정 수

##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09년 8월 17일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8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1. 제 안 이 유

- 『2020년 대전권광역도시계획(2005.1)』 수립 이후 정부가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2008.9.30)」을 발표하고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2008.11.3)」을 개정함.
-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대전권광역도시계획 변경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대전권광역도시계획변경(안)을 마련하고 그동안 관계 전문가 및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을 거쳐 대전광역시장·충청남도지사·충청북도지사가 공동 입안하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의견을 듣고자 함.

## 2. 주 요 내 용

- 목표년도 : 2020년 (변경없음)
- 공간적 범위 : 4,633.87km<sup>2</sup> (대전광역시, 충청남도·충청북도 일원)
- 계획인구 : 275만명 (변경없음)

○ 주요변경 내용

- － 기 수립된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골격 유지
- － 정부 정책변화에 따른 대전권개발제한구역(대전, 충청남·북도)해제 허용총량 추가 확보

〈개발제한구역 조정(변경) 내역〉

- 대 전 시 : 도시기반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용지와 대덕연구개발 특구내 첨단기술 상용화 첨단산업용지 추가확보
- 충청남도 : 계룡대 해군아파트와 계룡시 하수처리장내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경계조정
- 충청북도 : 청원군, 옥천군 산업용지 추가확보

[개발제한구역해제허용총량(변경)]

(단위 : km<sup>2</sup>)

구 분	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당 초	31.279	24.023	3.115	4.141
변 경	39.925	31.229	3.313	5.383
증·감	8.646 (27.6%)	7.206 (30%)	0.198 (6.4%)	1.242 (30%)
활용용도		첨단 산업용지	군사시설 하수처리시설	산업용지

- ※ 참고 1) 광역도시계획은 개발제한구역해제 허용총량을 정하고, 해제위치 도면과 조서 등은 작성하지 않음.
- 2) 구체적인 해제위치, 개발방안 등은 도시관리계획수립 및 사업계획수립 과정에서 검토·확정하므로 계획의 유연성이 확보됨.

### 3. 검토의견

- 금번 의견청취 대상인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은 지난 2005. 1월 계획수립 이후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의회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 주요 변경내용은,
  - 기 수립된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우리 시와 충청남·북도 일원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 해제허용총량 31.279 제곱킬로미터 이외에 8.646 제곱킬로미터를 추가 해제하여 도시기반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용지와 대덕연구개발특구내 첨단기술 상용화 첨단산업용지를 추가 확보하려는 사항임.
-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허용총량을 추가 확보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이 전국적, 권역별, 획일적으로 배분됨에 따라 권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보다 현실적인 배분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 기 지정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지정만 해놓고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불합리한 구역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